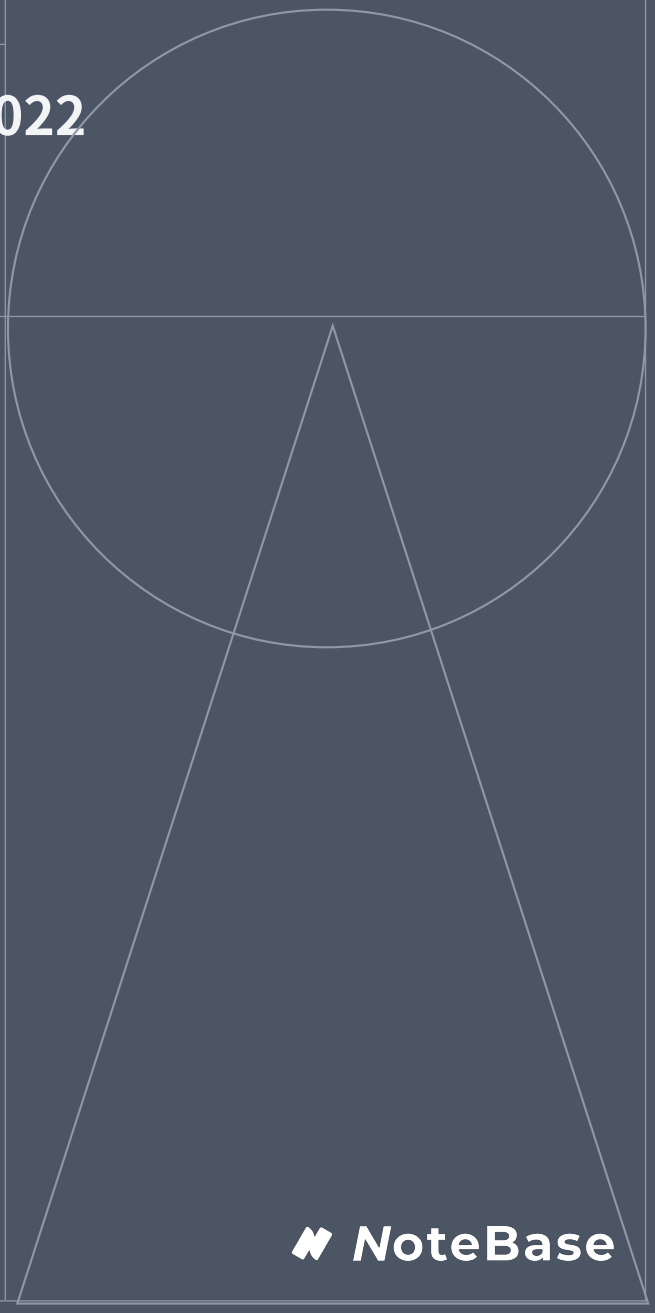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2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2

문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②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③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 부담의 분배, 영세율,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재 구입액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여 소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 과세한다.
총소득형은 투자재 구입액 전액을 즉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형과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경향 때문에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높아져 역진성이 나타난다.
② O —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앞 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세금이 부과된다.
③ O — 우리나라는 수출 재화에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으로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한다.
④ O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총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올바른 표현은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이다. 투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총소득형이 아니라 소비형으로 분류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의 '총소득형'을 국민경제의 총소득에 넓게 과세한다는 일상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부가가치세 유형은 이름의 느낌이 아니라 투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공제하는 소비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가가치세 유형을 묻는 경우 투자재 구입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처리부터 확인한다. 이를 즉시 공제하면 소비형이고, 감가상각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소득형이며, 공제하지 않는 방식은 총생산형이다.

암기 포인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 과세·매입세액공제·수출 영세율·소비형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800 이다.)

ㄱ. 소득 증가 시 평균세율 증가
ㄴ.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한계세율 일정
ㄷ. 세수탄력성 < 1
ㄹ. 한계세율 < 평균세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세수함수에서 평균세율, 한계세율, 세수탄력성을 각각 계산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성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세수함수는 $T = -400 + 0.5Y$이다. $Y > 800$이므로 $T > 0$이며, 세수탄력성의 분모도 양수이다. 평균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세금이다.

사용할 공식

평균세율: $ATR = \frac{T}{Y}$
한계세율: $MTR = \frac{dT}{dY}$
세수탄력성: $\varepsilon_T = \frac{dT}{dY}\frac{Y}{T}$

평균세율은 세부담의 평균적 비율, 한계세율은 추가 소득에 대한 세부담, 세수탄력성은 소득의 1% 변화에 대한 세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이 세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평균세율은 $ATR = \frac{-400 + 0.5Y}{Y} = 0.5 - \frac{400}{Y}$이다. Y가 증가하면 $\frac{400}{Y}$가 감소하므로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 한계세율은 $MTR = \frac{dT}{dY} = 0.5$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세수탄력성은 $\varepsilon_T = 0.5\frac{Y}{-400 + 0.5Y} = \frac{0.5Y}{0.5Y - 400}$이다. $Y > 800$에서는 분모가 양수이면서 분자보다 작으므로 $\varepsilon_T > 1$이다.
4. $ATR = 0.5 - \frac{400}{Y} < 0.5 = MTR$이므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 따라서 ㄱ과 ㄴ만 옳다.

선지 판단

① O — ㄱ의 평균세율 증가는 $ATR = 0.5 - \frac{400}{Y}$에서 확인되고, ㄴ의 일정한 한계세율은 $MTR = 0.5$에서 확인된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의 '세수탄력성 < 1'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수탄력성 > 1'이다.

③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수탄력성 > 1'이고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다.

④ X —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만 옳으며,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고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⑤ X —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ㄴ만 옳으며,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고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오답 포인트

절편이 음수인 선형 세수함수에서 기울기 0.5만 보고 모든 세율과 탄력성이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평균세율에는 $-400/Y$가 포함되므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고, 세수탄력성은 분모 $T = 0.5Y - 400$가 분자 $0.5Y$보다 작아 1보다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세수함수 $T = a + bY$가 나오면 $ATR = a/Y + b$, $MTR = b$, $\varepsilon_T = bY/T$를 각각 구한 뒤 부호와 크기를 비교한다. 절편 a의 부호가 평균세율의 변화 방향과 평균세율·한계세율의 대소를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음의 절편을 가진 선형 세수함수에서는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MTR > ATR$,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다.

NoteBase

문 3.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②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③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⑤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정답 1번

쟁점

개인소득세 감면 방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소득계층별 세 부담 및 재화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누진세율 아래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은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액공제액은 한계세율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제도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담세력이 큰 사람이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공평성이다.

핵심 구분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 부담은 대체로 '공제액 × 한계세율'이므로 같은 공제액이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크다. 반면 정액 또는 동일 공제율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공제액 자체가 한계세율에 따라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 총규모가 일정하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편중된 혜택을 줄여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한다. 2022년 당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일정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 부담 감소를 주므로, 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이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수직적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개선된다. 틀린 표현은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수직적 공평성은 개선된다'이다.
② O — 소득공제로 인한 세 부담 감소는 공제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큰 사람의 한계세율이 높으므로 실제 감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
③ O — 특정 재화의 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면 그 지출로 절감되는 세금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질 구입비용이 낮아진다. 따라서 다른 재화에 대한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할 수 있다.
④ O — 2022년 당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요건을 충족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두고 있었다.
⑤ O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공제액의 결정 구조는 납세자의 한계세율과 직접 관계가 없다.

오답 포인트

①의 '악화된다'가 함정이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의 높은 한계세율만큼 감면 혜택이 커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액을 직접 빼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편중을 완화한다. 또한 ③은 단순한 세 부담 감소가 아니라 특정 재화의 실질 구입비용을 낮춰 상대가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면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빠지면 세액공제이다. 누진세율에서 소득공제의 감면액은 한계세율에 따라 커지지만 세액공제액은 한계세율과 직접 연동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의 수직적 공평성 효과를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계세율 영향',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공평성 개선'이다.

NoteBase

문 4.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③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④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⑤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무조건부·비대응보조금과 대응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예산선 및 공공서비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조건부·비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예산선을 평행 이동시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 지출에 일정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발생시킨다.
끈끈이 효과는 주민에게 같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날 때보다 지방정부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공공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구매력을 늘리므로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사이의 상대가격은 바꾸지 않은 채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O — 대응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실질적인 상대가격을 낮추어 사적재 대신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상대가격 왜곡으로 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가 본래 선택했을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어 비효율성이 생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이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가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공공서비스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대응보조금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공공서비스 소비량을 증가시킨다'이다.
④ O —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보조금이 주민의 조세 부담 경감이나 사적소비로 빠져나가기보다 지방정부 부문에 머물러 지방정부 지출을 늘린다.
⑤ O — 비대응보조금은 용도 제한 없이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지방정부가 그 일부를 주민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주민의 가처분소득과 사적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격 변화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언제나 서로 반대라고 오해하게 만든다. 대응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리며, 공공서비스를 정상재로 보는 표준적 분석에서는 소득효과도 같은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의 사용처가 자유로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면 소득효과, 자체 지출에 비례해 지원되어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비대응은 소득효과, 대응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끈끈이 효과는 지방공공지출의 큰 증가이다.

NoteBase

문 5.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④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⑤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의 과세대상, 재고자산 평가와 인플레이션, 부채의 조세절감 효과, 감가상각의 투자 효과, 조세 전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세법상 비용을 더 일찍 또는 더 크게 인정하면 과세소득의 현재가치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은 부채조달에 조세상 이점을 주고, 가속상각은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투자비용을 낮춘다.

선지별 해설

① O -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O -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먼저 매입한 낮은 원가가 매출원가로 계상되고 기말재고는 최근의 높은 가격에 가깝게 평가된다. 이에 따라 명목이익과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③ O -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 등에는 제한이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이다. 가속상각은 감가상각비를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이 인정하여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낮추므로 투자에 유리하다.
⑤ O - 법인세 부과 후 기업이 상품가격을 올려 세 부담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넘겼다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므로 소비자에게 조세가 전가된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감가상각 총액과 감가상각 시점을 혼동하게 만든다. 가속상각의 핵심은 공제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으며, 조기 공제는 납세 이연과 현재가치 절감 효과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관련 선지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비용 인정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한다. 비용 공제가 커지거나 빨라지면 세후 투자수익이 높아지고, 세금 때문에 가격이나 요소보수가 변하면 그 변화로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 손금은 부채에 유리하고, 가속상각은 공제를 앞당겨 투자에 유리하다.

NoteBase

문 6.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②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③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④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⑤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명목소득·명목채무·명목액으로 정해진 공제와 감가상각비의 실질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낮추므로 명목액이 고정된 채무와 공제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누진소득세에서는 물가만큼 명목소득이 늘어도 과세구간이나 공제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더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과세구간 상승 효과가 생긴다. 선형누진소득세도 일정한 한계세율과 고정된 면세점·공제액의 결합으로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이 효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누진소득세의 과세구간과 공제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만 증가해도 더 높은 과세구간이 적용되거나 공제의 실질가치가 줄어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② O. 명목액이 고정된 국가채무는 물가수준이 상승할수록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줄어들므로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③ O. 기업 차입금이 고정된 명목채무라면 인플레이션으로 상환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인 기업에 유리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이다. 선형누진소득세에서도 고정된 면세점이나 공제액의 실질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감소하므로 실질 조세부담은 증가한다.
⑤ O. 취득 당시의 명목원가를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는 인플레이션 때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그 결과 실질적인 비용 공제가 줄고 과세소득이 커져 법인세의 실질 부담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선형'이라는 말 때문에 비례세처럼 조세부담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할 수 있어도 고정된 면세점·공제 때문에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상승하므로, 인플레이션 시 그 고정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먼저 명목액이 고정된 항목을 찾는다. 고정 명목채무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며, 고정 명목공제와 감가상각비의 실질가치 하락은 과세소득과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암기 포인트

인플레이션은 고정 명목채무의 실질가치는 낮추고, 고정 명목공제의 실질가치도 낮춰 세부담은 높인다.

NoteBase

문 7.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②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③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④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⑤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세율, 과세 대상의 규모, 노동수요와 보상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가 임금에 쐐기를 만들어 노동량을 효율적인 수준에서 변화시킴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잉여의 손실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과 임금총액이 클수록, 노동수요 및 보상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노동량의 변화가 커져 초과부담도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세전임금과 세후임금 사이의 조세 쐐기가 커지고 노동량의 왜곡도 확대되므로 초과부담이 커진다.
② O — 세율이 일정할 때 임금률이 높아지면 노동 한 단위에 부과되는 세액과 왜곡의 금액 규모가 커지므로 초과부담이 커진다.
③ O —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의 규모를 나타낸다. 임금총액이 커지면 같은 세율과 탄력성 아래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절대액도 커진다.
④ X — 틀린 표현은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이다. 노동수요가 덜 탄력적이면 세금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가 작아져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로 고치면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이다.
⑤ O —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은 세후임금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이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공급량과 고용량의 변화가 커져 초과부담도 커진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조세 부담의 귀착과 초과부담을 혼동하기 쉽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한쪽이 부담하는 세액은 커질 수 있지만, 거래량인 노동량의 감소는 작으므로 효율성 손실인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과부담은 '조세 쐐기 때문에 노동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과 과세 기반의 규모가 커지거나 노동수요·보상노동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초과부담이 커지고, 어느 한쪽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노동량 반응과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암기 포인트

세율·임금총액·탄력성은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왜곡은 작다.

NoteBase

문 8.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ㄷ.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ㄹ.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ㅁ.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정적자의 효과에 관한 통화주의학파·케인즈학파·리카르도·러너·배로의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ㄴ, ㄷ, ㅁ이 옳다.

핵심 정리

통화주의학파: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라는 구축효과 때문에 효과가 제한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유휴자원이 많은 불황기보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케인즈학파: 불황기에는 유휴자원이 존재하므로 재정지출 확대가 승수과정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리카르도 대등정리: 정부지출이 같다면 조세와 국채 중 어느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계가 미래 조세를 예상하므로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러너: 내부채무는 국민 상호 간의 채권·채무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의 실질적 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배로: 세대 간 이타성과 완전한 자본시장 등의 가정 아래 국채발행에 대응하여 민간저축이 증가하므로 국민저축과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이 틀렸다. 불황기에는 유휴자원이 많아 재정확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크므로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올바르게는 '통화주의학파에서 구축효과는 불황기보다 호황기에 크게 나타난다'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ㄴ, ㄷ, ㅁ이다.
② X — ㄱ과 ㄹ이 틀렸다. 구축효과는 불황기보다 호황기에 더 크며, 러너는 내부채무를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ㅁ이다.
③ X — ㄹ이 틀렸다. 내부채무의 원리금 지급은 같은 국민 내부의 이전이므로 러너의 견해에서는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ㄹ 대신 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ㅁ이다.
④ O — 케인즈학파의 승수효과에 관한 ㄴ, 국채와 조세의 재원조달 방식이 총수요에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ㄷ, 재정적자가 국민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배로의 ㅁ이 모두 옳다.
⑤ X — ㄹ이 틀리고 ㄴ이 빠졌다. 러너는 내부채무를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으로 보지 않으며, 케인즈학파는 국채로 충당한 재정적자가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늘린다고 본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리카르도와 배로의 표현이 비슷해 둘 중 하나만 옳다고 판단하거나, 내부채무도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일상적 직관으로 ㄹ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리카르도와 배로가 모두 재원조달 방식의 중립성을 말하고, 러너는 내부채무를 세대 전체의 순부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파와 학자의 대표 연결어로 판단한다. 케인즈는 승수효과, 리카르도·배로는 국채와 조세의 대등성, 러너는 내부채무의 세대 전체 부담 부정, 통화주의는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는 승수, 리카르도·배로는 대등, 러너는 내부채무의 세대 전체 부담 부정이다. 구축효과는 불황기보다 호황기에 크다.

NoteBase

문 9.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②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③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④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⑤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평과세의 두 기준인 능력원칙·편익원칙과 외부불경제를 바로잡는 교정과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력원칙은 소득·재산·가족 상황 등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배분하는 공평 기준이다.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공평 기준이다. 반면 교정과세는 오염처럼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내부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기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교정과세이다.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니다. 틀린 분류인 '공평과세'는 '외부불경제의 교정을 위한 효율성 과세'로 고쳐야 한다.
② O — 고소득자는 부담능력이 더 크므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 능력원칙의 설명이다.
③ O — 부양가족이 많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부담능력이 작다고 보아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능력원칙에 따른 공평과세이다.
④ O — 주행거리는 도로 이용과 그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로 볼 수 있다.
⑤ O — 공원이 제공한 편익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면 그 편익이 큰 주택에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편익원칙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환경세도 바람직한 조세라는 점 때문에 공평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조세의 정당성 일반이 아니라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①은 오염이라는 외부효과의 교정, ②·③은 부담능력, ④·⑤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과세 근거가 소득·재산·가족 상황이면 능력원칙, 공공서비스 이용·수혜이면 편익원칙으로 판단한다.
오염·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세금이면 공평과세보다 외부불경제의 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능력대로 부담하고, 편익만큼 부담하며, 오염세는 외부효과를 교정한다.

NoteBase

문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에서 세율 인상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하고, 적발확률·벌금률의 효과 및 탈세와 절세·조세회피의 차이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납세자가 적발확률과 벌금을 고려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신고소득 또는 탈루소득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의 수익성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소득효과는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사람의 위험기피도를 높여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율 인상의 총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다. 세율이 오르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 한 단위에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O — 세율 상승은 세후소득을 낮춘다.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커지므로 소득효과에 의해 위험한 탈세를 줄이고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③ X — 틀린 부분은 심리적 비용을 알링햄-샌드모 기본모형의 결정요인으로 본 점이다. 기본모형은 적발확률과 벌금에 따른 금전적 결과 및 기대효용으로 탈세를 설명하며, 죄책감이나 낙인 같은 심리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심리적 비용을 별도로 도입한 확장모형에서는 그 비용이 클수록 탈세가 감소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이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이고, 조세회피도 형식상 적법한 수단을 이용한다. 불법적인 소득 은닉이나 허위 신고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탈세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이다. 적발확률이나 벌금률이 높아지면 탈세의 기대비용이 커지므로 탈루소득은 감소한다. 세율 상승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이를 적발확률·벌금률의 효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세율 상승의 두 효과를 뒤집는 것이다. 대체효과는 탈세의 수익성을 높여 탈루소득을 늘리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아래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인다. 또한 기본모형의 금전적 기대효용 분석과 심리적 비용을 추가한 확장 설명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은 '탈세 수익 증가'와 '세후소득 감소'를 나누어 판단한다. 전자는 대체효과로 탈루소득을 늘리고, 후자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아래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을 줄인다. 적발확률과 벌금률은 탈세의 기대비용을 높이므로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세율 상승: 대체효과는 탈루 증가, 소득효과는 탈루 감소, 총효과는 불분명하다. 적발확률·벌금률 상승: 탈루 감소이다.

NoteBase

문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족기준
A	유○○	0.5억원	500만원	5000만원
	이○○	1.5억원	3500만원	
B	박○○	1억원	2000만원	5000만원
	전○○	1억원	2000만원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⑤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개인기준 과세와 가족기준 과세의 세액을 비교하여 결혼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결혼중립성은 혼인 여부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담세력이 같은 가족에게 같은 세액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조건 정리

세율은 소득 5,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초과분에 30%이다.
A부부의 개인소득은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고, B부부의 개인소득은 각각 1억원이다. 두 부부의 가족 합산소득은 모두 2억원이다.
개인기준 총세액은 A부부가 500만원+3,500만원=4,000만원, B부부가 2,000만원+2,000만원=4,000만원이다.
가족기준 총세액은 두 부부 모두 5,000만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의 세액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소득-5,000만원)× 30\%
가족기준 과세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이 누진세율을 한 번 적용한다. 결혼중립성은 혼인 전후의 총세액이 같은지로,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가족소득에 같은 세액이 부과되는지로 판단한다.

계산 과정

1. A부부의 개인기준 세액은 500만원과 3,500만원이므로 합계 4,000만원이다.
2. B부부의 개인기준 세액은 각각 2,000만원이므로 합계 4,000만원이다.
3. 가족기준에서는 A부부와 B부부 모두 합산소득이 2억원이므로 세액은 500만원+1억 5,000만원× 30\%=5,000만원이다.
4. 두 부부 모두 세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하므로 결혼중립성은 충족하지 않는다. 반면 합산소득이 같은 두 가족의 세액이 모두 5,000만원이므로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한다.

선지 판단

① X — A부부는 과세단위를 가족기준으로 바꾸면 총세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결혼중립성 충족'이며, 올바르게는 '결혼중립성 미충족'이다.
② X — B부부도 총세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결혼중립성 충족'이며, 올바르게는 '결혼중립성 미충족'이다.
③ X — 가족기준에서 A부부와 B부부는 같은 합산소득 2억원에 대해 똑같이 5,000만원을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A부부-수평적 공평성 미충족'이며, 올바르게는 'A부부-수평적 공평성 충족'이다.
④ X — B부부 역시 같은 가족소득을 가진 A부부와 동일한 5,000만원을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B부부-수평적 공평성 미충족'이며, 올바르게는 'B부부-수평적 공평성 충족'이다.
⑤ O — A부부는 가족기준 과세에서 같은 합산소득을 가진 B부부와 동일한 5,000만원을 부담하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된다.

오답 포인트

결혼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①이나 ②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가족기준으로 바꾼 뒤 두 부부 모두 세액이 1,000만원 늘어나므로 결혼중립성은 깨지지만, 같은 합산소득에는 같은 5,000만원이 부과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개인기준 총세액과 가족기준 총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같은 가족의 과세단위 변경 전후 세액을 비교하면 결혼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고, 합산소득이 같은 서로 다른 가족의 세액을 비교하면 수평적 공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혼인 전후 세액이 같으면 결혼중립성, 같은 가족소득의 세액이 같으면 수평적 공평성이다.

NoteBase

문 12.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②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③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④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⑤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누진세의 찬반 논거를 구분하고, 조세부담의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이다.
능력원칙은 정부서비스의 혜택과 관계없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담세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한다.
편익원칙은 정부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한다. 따라서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설명은 능력원칙이 아니라 편익원칙의 논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누진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한계세율과 복잡한 공제·감면 구조가 소득 은폐나 조세회피의 유인을 키우고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② O. 누진세가 노동·저축·투자에서 얻는 추가 소득의 세후 보상을 줄여 경제활동의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반대 논거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이다.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기준으로 부담을 정하는 것은 편익원칙이다. 올바르게는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은 더 큰 담세능력을 지니므로 더 많이 부담한다는 논리로 누진세에 찬성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미래 소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저소득 상태에 놓일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장치로 누진세와 재분배를 지지할 수 있다.
⑤ O. 밀의 동등희생 원칙은 과세로 인한 효용의 희생을 공평하게 배분하려는 원칙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 부담을 지우는 누진과세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경제적 능력'이라는 말로 능력원칙처럼 보이게 한 뒤, 판단 기준을 '정부서비스 혜택'으로 바꾸었다. 혜택을 기준으로 삼으면 편익원칙이고,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능력원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근거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면 편익원칙, '소득·재산 등 부담할 능력'이면 능력원칙으로 판단한다. 누진세의 찬성 논거에는 담세능력·소득재분배·위험 대비가, 반대 논거에는 경제적 유인 약화·조세회피·제도 복잡성이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혜택만큼 내면 편익원칙, 능력만큼 내면 능력원칙이다.

NoteBase

문 13.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③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④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지출의 의미와 대표적인 유형을 알고, 세제상 혜택과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이연 등 조세의 예외를 두어 세입을 줄이는 제도이다. 정부가 예산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직접지출이며, 조세를 덜 걷는 방식인 조세지출과 구별된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러한 조세감면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관리하여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역을 드러내고 관리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O —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은 통상적인 감가상각보다 비용을 앞당겨 인정하여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는 세제상 혜택이므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이다. 남북협력기업에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출하는 직접지출이며, 올바르게는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상 혜택이므로 조세지출의 예이다.
⑤ O —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수를 감소시키므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보조금도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조세지출과 정책 효과가 비슷하지만, 지원 방식이 다르다. 예산에서 돈을 지급하면 직접지출이고, 공제·감면·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덜 걷으면 조세지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 지원이 세법상의 예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인지, 예산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전자는 조세지출이고 후자는 직접지출이다.

암기 포인트

세금을 덜 걷으면 조세지출, 예산에서 돈을 주면 직접지출이다.

NoteBase

문 14.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가 세후이자율을 낮출 때 현재소비와 저축에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이자율 $r(1-t)$이 낮아져 미래소비의 현재소비 대비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대체효과: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한다.
소득효과: 저축자의 실질적인 생애소득이 감소한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두 소비가 감소하며, 현재소비의 감소는 현재소득 중 저축으로 남는 금액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저축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민간저축의 최종 변화는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NoteBase

제시문 판단

첫째 진술 X: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서로 바꾸어 썼다. 올바르게는 소득효과가 저축을 증가시키고 대체효과가 저축을 감소시킨다.
둘째 진술 O: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 및 저축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으로 분석한다.
셋째 진술 O: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넷째 진술 O: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고, 정상재를 전제로 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진술 O: 저축을 줄이는 대체효과와 저축을 늘리는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총 4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진술은 1개가 아니라 4개이다. '1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옳은 진술은 2개가 아니라 4개이다. '2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③ X: 옳은 진술은 3개가 아니라 4개이다. '3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④ O: 옳은 진술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4개이므로 맞는다.
⑤ X: 옳은 진술은 5개가 아니라 4개이다. '5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첫째 진술은 저축에 대한 두 효과의 방향을 뒤바꾼 함정이다. 이자소득세로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고, 실질 생애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후이자율 하락이 현재소비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체효과의 방향을 정한다. 다음으로 두 시점의 소비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로 현재소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소득효과의 방향을 정한다. 두 효과가 반대이면 저축의 총효과는 불확정이다.

암기 포인트

이자소득세는 대체효과로 저축을 줄이고 소득효과로 저축을 늘리므로, 총저축 효과는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5.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 - 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③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⑤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종량세는 기업이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한계비용에 더하여 과세 전후의 가격·거래량·조세부담·조세수입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P = 200 - Q$이고 한계비용은 $MC = 40$이다. 총수입은 $TR = (200 - Q)Q = 200Q - 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200 - 2Q$이다. 단위당 60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기업이 체감하는 한계비용은 $MC + t = 40 + 60 = 100$이 된다.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다. 과세 후에는 $MR = MC + t$를 사용한다. 조세수입은 tQ_1,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총부담은 $(P_1 - P_0)Q_1$이다. 이 문항의 출제 기준에서 초과부담 450은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제외한 삼각형 부분이므로 $\frac{1}{2}(P_1 - P_0)(Q_0 - Q_1)$로 계산한다. 이는 독점의 기존 생산량 왜곡까지 반영하는 일반적인 총사회적 초과부담과 구별된다. 총사회적 초과부담의 증가는 과세 전후의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조세수입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과세 전에는 $200 - 2Q = 40$이므로 $Q_0 = 80$, $P_0 = 200 - 80 = 120$이다.
2. 과세 후에는 $200 - 2Q = 100$이므로 $Q_1 = 50$, $P_1 = 200 - 50 = 150$이다.
3. 소비자 가격은 단위당 30 상승하고 거래량은 30 감소한다.
4.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총부담은 $30 \times 50 = 1{,}500$이고, 조세수입은 $60 \times 50 = 3{,}000$이다.
5. 출제 기준상 소비자 측 삼각형 부담은 $\frac{1}{2} \times 30 \times 30 = 450$이다.
6. 일반적인 총사회적 초과부담의 증가는 과세 전 총잉여 $3{,}200 + 6{,}400 = 9{,}600$에서 과세 후 총잉여 $1{,}250 + 2{,}500 + 3{,}000 = 6{,}750$을 뺀 2,8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과세 전 가격은 120, 과세 후 가격은 150이므로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② O. 공식 채점의 출제 기준에서는 가격상승분과 거래량 감소분이 각각 30이므로 소비자 측 삼각형 부담이 $\frac{1}{2} \times 30 \times 30 = 450$이다. 다만 이를 독점의 기존 왜곡까지 반영한 총사회적 초과부담으로 해석하면 그 값은 2,850이므로 두 개념은 구별된다.
③ X.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가 틀렸다. 소비자는 과세 후 판매량 50단위에 대해 단위당 30의 가격상승분을 부담하므로 총부담은 $30 \times 50 = 1{,}500$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500이다'이다.
④ O. 과세 후 거래량이 50이므로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 60에 거래량 50을 곱한 3000이다.
⑤ O. 과세 전 거래량은 80이고 과세 후 거래량은 50이므로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1200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과 과세 후 거래량을 정확히 결합하지 않은 값이다. 총 조세액 3000 전체를 소비자 부담으로 보아도 안 된다. 소비자 부담은 소비자가 실제로 더 낸 단위당 가격상승분 30에 과세 후 거래량 50을 곱해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함수에서 한계수입을 구하고, 과세 전에는 $MR = MC$, 과세 후에는 $MR = MC + t$로 수량을 구한다. 각 수량을 수요함수에 대입해 가격을 구한 뒤, 조세수입과 소비자 부담은 모두 과세 후 거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기업에 대한 종량세는 한계비용을 세액만큼 올린다. 조세수입은 '세액×과세 후 거래량', 소비자 총부담은 '가격상승분×과세 후 거래량'이다.

NoteBase

문 16.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하버거의 조세귀착 일반균형 모형에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요소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가 같으면 산출량 구성의 변화가 노동과 자본의 상대수요를 바꾸지 않으므로 산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산출효과: 조세로 상대가격과 산출량 구성이 변하면서 요소의 상대수요가 변하는 효과이다. 어느 부문이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며, 이 문제처럼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가 같으면 그 효과는 0이다.
요소대체효과: 특정 부문의 특정 요소에 과세할 때 그 부문이 과세된 요소를 덜 쓰고 다른 요소로 대체하면서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X부문의 자본에 과세하면 X부문의 자본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낮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두 재화에 동일한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X와 Y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요소집약도도 같으므로 노동과 자본의 상대수요 및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이다.
② X — X부문의 물품세는 X의 산출을 줄일 수 있지만,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가 동일하므로 산출구성의 변화가 노동과 자본의 상대수요를 바꾸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이다.
③ X —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 X의 산출이 감소하더라도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가 같으므로 산출효과는 0이다. 틀린 표현은 '산출효과를 통해 … 낮추게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산출효과만으로는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이다.
④ O — X부문의 자본에 과세하면 X부문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려 한다. 경제 전체의 자본 상대수요가 감소하므로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낮아진다.
⑤ X —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가 같아 산출효과는 0이고,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가 유발하는 요소대체효과만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산출효과는 0이고 요소대체효과만 작용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X부문의 자본 과세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고 서술하지만 작동 경로가 다르다. 이 문제에서는 요소집약도가 동일하므로 산출효과는 사라지고, 과세된 자본을 노동으로 바꾸려는 요소대체효과만 남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부문의 요소집약도를 비교한다. 요소집약도가 같으면 산출효과를 0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특정 요소에만 과세되었는지 확인하고, 특정 요소세라면 과세된 요소의 수요와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요소대체효과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동일한 요소집약도이면 산출효과는 0이고, 특정 요소 과세에서는 과세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요소대체효과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공요금 설정 방식이 효율성, 적자 보전, 분배 및 시장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최대부하가격설정: 수요가 시기별로 달라질 때 성수기에는 시설용량 비용까지 반영하고, 비성수기에는 한계운영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계비용가격설정: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큰 자연독점에서는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이부가격제도: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종량요금을 함께 부과하여, 종량요금은 한계비용에 맞추면서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램지가격설정: 총비용을 회수한다는 제약 아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후생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져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ㄴ을 빼고 ㄹ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② O — ㄱ은 비성수기 요금을 한계운영비용에 맞추는 최대부하가격설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ㄷ은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므로 결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ㄹ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수요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램지가격이 저소득층의 필수서비스 부담을 키우는 등 분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③ X —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의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틀렸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므로 여러 기업의 중복 생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자연독점 구조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ㅁ을 빼고 ㄷ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④ X —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만 자연독점에서는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다. 따라서 ㄴ을 빼고 ㄱ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⑤ X —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렸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여러 공기업으로 생산을 분산하기보다 한 기업이 집중 생산하는 편이 평균비용을 낮춘다. 따라서 ㅁ을 빼고 ㄱ을 넣은 'ㄱ, ㄷ, ㄹ'이 옳다.

오답 포인트

ㄴ은 '효율성'과 '수지 균형'을 혼동하게 만든다.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적이지만 자연독점에서는 결손을 낼 수 있다. ㅁ은 규모의 경제를 경쟁 촉진과 혼동하게 만든다. 규모의 경제가 강할수록 생산 주체를 여러 개로 나누면 평균비용 절감 효과가 약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진술을 세 축으로 판별한다.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효율성, 기본요금의 부과는 고정비 회수, 규모의 경제는 자연독점과 연결한다. 램지가격은 효율적 비용 회수에는 유리하지만 가격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 분배 문제를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성수기는 한계비용, 이부요금은 기본료로 적자 보전, 램지는 역탄력성·분배 문제, 규모의 경제는 자연독점이다.

NoteBase

문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례소득세로 순임금이 낮아질 때 여가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에 각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비례소득세로 순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낮아지므로 여가가 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소득효과: 세후소득의 감소가 여가 수요를 바꾸는 효과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가 줄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여서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총효과의 방향은 확정할 수 없다.

② O
누진소득세도 세후임금을 낮춰 노동공급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③ O
여가가 열등재이면 세후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가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도 여가를 늘리므로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O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임금 상승에도 노동공급이 감소하므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⑤ O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로 순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린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금 부과로 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보고 노동공급 증가를 단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순임금 하락은 여가의 기회비용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 정상재인 여가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금으로 순임금이 하락하면 먼저 대체효과를 '여가 증가·노동 감소'로 고정한다. 그다음 소득 감소에 대해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 감소·노동 증가', 열등재이면 '여가 증가·노동 감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 증가여서 방향이 충돌하고,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노동 감소여서 방향이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④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정 자본스톡과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이 되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보유·사용하면서 부담하는 기회비용이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가치와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적정 자본스톡을 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적정 자본스톡이 늘고 투자가 유발된다. 다만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적정 자본스톡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는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 즉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에 달려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자본을 사용하는 부담이 줄어 적정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실제 자본스톡을 그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증가한다.
② O —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사용자비용이 변해도 자본을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적정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다. 법인세가 사용자비용을 변화시키더라도 그 탄력성이 작으면 적정 자본스톡의 반응도 작다. 올바르게는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다.
④ O —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하고 지급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투자지출 공제와 장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대응하므로 한계투자의 수익률 조건을 왜곡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O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와 차입이자를 모두 공제하고 세법상 감가상각을 실제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시키면 자금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정상수익과 경제적 감가상각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이 경우 법인세는 한계투자의 사용자비용을 높이지 않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세율 변화가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사용자비용 변화에 자본스톡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탄력성의 의미를 뒤집어 놓았다. 탄력성이 작으면 법인세로 사용자비용이 변해도 자본스톡과 투자의 변화는 작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의 투자효과는 '세제 변화 → 자본의 사용자비용 변화 → 적정 자본스톡 변화 → 투자 변화'의 순서로 판단한다.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크면 마지막 두 단계의 반응이 크고, 작으면 반응도 작다. 즉시상각과 이자공제 조건은 비용과 수익의 과세가 대칭적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용자비용 하락은 투자 증가, 사용자비용탄력성 상승은 조세의 투자효과 증가이다.

NoteBase

문 20.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효율성·형평성 효과와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와 지역 사정에 맞추어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 간 경쟁과 지역 정보 활용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역별 재정능력 차이는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처럼 같은 비용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을 때, 지역별 선호에 맞춘 분권적 공급이 획일적인 중앙 공급보다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
ㄱ은 옳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릴 수 있지만 의존재원이므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할 수 없다.
ㄷ은 옳다. 세원과 경제력의 지역별 차이 때문에 분권화 이후 재정력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없고 지역 간 외부효과도 없다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ㅁ은 옳지 않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수요에 가까이 있으므로 지방공공재에 관한 정보 획득 비용이 중앙정부보다 낮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옳은 진술인데 옳지 않은 진술에 포함했고, 실제 옳지 않은 ㄹ과 ㅁ을 빠뜨렸다. ‘ㄱ, ㄴ, ㄷ’은 ‘ㄴ, ㄹ,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옳은 진술이고 ㅁ이 빠졌다. ‘ㄱ, ㄴ, ㄹ’은 ‘ㄴ, ㄹ,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ㄷ은 옳은 진술이고 ㅁ이 빠졌다. ‘ㄴ, ㄷ, ㄹ’은 ‘ㄴ, ㄹ,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 ㄹ, 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교부금은 의존재원이고, 오우츠의 정리는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지방정부의 지역 정보 획득 비용은 중앙정부보다 낮다.
⑤ X —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이 빠졌다. ‘ㄷ, ㄹ, ㅁ’은 ‘ㄴ, ㄹ, ㅁ’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교부금이 지방의 가용재원을 늘린다는 사실과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판단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규모의 경제가 있음’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진술을 먼저 따로 판정한다. 경쟁 촉진과 지역 정보 활용은 분권의 효율성 장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단점으로 본다. 오우츠의 정리는 ‘규모의 경제 없음·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을 확인하고, 교부금은 자체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이라는 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분권의 효율성은 지역 선호와 경쟁, 한계는 지역 격차이다. 오우츠의 조건은 규모의 경제 없음·외부효과 없음이다.

NoteBase

문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③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파레토효율성의 정의와 시장실패·공공부문 제도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의 후생도 더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파레토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 경쟁균형이 파레토효율적임을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시장실패 요인은 이 결론이 성립하는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완전경쟁 등 일정한 조건 아래 경쟁균형이 파레토효율적임을 뜻하므로,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끈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정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O —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이다.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그 상태가 파레토비효율적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의 관성을 줄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O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이용자에게 비용 신호를 주고 과도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격기능을 활용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경우에 효율성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파레토개선 가능'과 '파레토효율'을 같은 상태로 바꿔 놓았다.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없어야 파레토효율적이다. 또한 ①과 ⑤는 각각 일정한 조건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설명이므로 무조건적 효율성 보장으로 확대해 읽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 배분에서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능하면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면 파레토효율적이다.

암기 포인트

파레토개선 가능 = 비효율, 파레토개선 불가능 = 파레토효율이다.

NoteBase

문 22.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 = \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W = U_A + 2U_B$일 경우,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용가능경계, 공리주의적·평등주의적·롤즈적 사회후생함수의 차이와 사회적 한계가중치의 의미를 묻는다.

핵심 개념

효용가능경계는 한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춰야 하는 파레토 효율적 효용 조합의 경계이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을 합산하며, 단순합 형태에서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고정 가중치를 둔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효용 격차를 싫어하므로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에 더 큰 사회적 한계가중치를 둔다. 불평등 회피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최소 효용만을 중시하는 롤즈적 기준에 가까워진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W = \min\{U_A, U_B\}$이며, 가장 낮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최대최소 원리를 따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효용가능경계 위의 배분은 이미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 지점에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므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다.
② O. 평등주의적 성향, 즉 불평등 회피 정도가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가장 효용이 낮은 사람만을 중시하는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③ O. 롤즈의 최대최소 원리는 두 사람 중 더 낮은 효용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므로 $W = \min\{U_A, U_B\}$로 나타낸다.
④ O. $W = U_A + 2U_B$에서는 U_A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후생이 1만큼, U_B가 한 단위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B의 효용에 부여된 사회적 한계가중치는 A의 2배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이다. 동일한 고정 가중치로 개인 효용을 합산하는 것은 단순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특징이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사회적 한계가중치를 부여한다.

오답 포인트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⑤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주의로 오인하기 쉽다. 평등주의는 사람마다 동일한 고정계수를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효용 격차를 줄이도록 낮은 효용에 더 큰 한계가중치를 둔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후생함수의 계수를 보면 각 개인 효용의 사회적 한계가중치를 비교한다. 단순합은 동일한 고정 가중치, 평등주의는 낮은 효용에 더 큰 한계가중치, 롤즈형은 최소 효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순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 평등주의는 낮은 효용에 더 큰 한계가중치, 롤즈는 최소 효용의 극대화이다.

NoteBase

문 23.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②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③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④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개입의 논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실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이다. 역선택은 거래 전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유형을 가려내지 못해 불리한 유형이 주로 선택되는 현상이며, 강제 가입은 위험 유형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을 넓혀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한다. 중립세는 민간의 상대가격과 선택을 바꾸지 않는 조세이고, 정부실패는 정부개입의 결과가 오히려 자원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이다.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면 은퇴 가능성 등 개인의 위험 유형과 관계없이 가입하게 되므로 특정 유형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이다.
② O — 중립세는 세금 부과 전후에 민간의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적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는 조세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③ O —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려면 우선 시장기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시장실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개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시장실패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④ O — 정부가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행동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 자원배분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⑤ O —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하지만, 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 배분상 비효율을 낳는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이 독점의 배분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기업의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별도 문제가 남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강제 가입'과 '역선택'을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기 쉽다. 역선택은 자발적으로 가입자를 가려 모을 때 심해지며, 강제 가입은 여러 위험 유형을 함께 가입시키는 해결 수단이다. 또한 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배분상 비효율을 없애지만 자연독점기업의 적자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제 가입은 역선택 완화, 중립세는 선택 비왜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 민간 반응의 통제 곤란은 정부실패 가능성,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배분 효율성 회복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강제 가입은 역선택을 줄이고, 한계비용가격은 독점의 배분상 비효율을 줄이지만 적자 문제를 남길 수 있다.

NoteBase

문 24.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frac{1}{2}q_A^2$, $C(q_B) = 30 + q_B^2$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 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① ㄱ: 100, ㄴ: 100단위

② ㄱ: 100, ㄴ: 200단위

③ ㄱ: 200, ㄴ: 100단위

④ ㄱ: 200, ㄴ: 200단위

⑤ ㄱ: 250, ㄴ: 100단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총저감량 제약 아래에서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하여 배출권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두 기업의 최초 배출량 합계는 1,000단위이고 30%를 줄이므로 총저감량은 300단위이다. 따라서 $q_A + q_B = 300$이다.
무료 할당량은 A 400단위, B 300단위로 총 700단위이며, 이는 감축 후 허용되는 총배출량과 같다.
구해야 할 값은 균형 배출권 가격과 기업 간 배출권 거래량이다.

사용할 공식

비용효율적인 배출권시장 균형에서는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진다.
$MAC_A = \frac{dC_A}{dq_A} = q_A, \qquad MAC_B = \frac{dC_B}{dq_B} = 2q_B$
따라서 $q_A = 2q_B$와 $q_A + q_B = 300$을 함께 사용한다. 비용함수의 상수항 40과 30은 미분하면 사라지므로 한계저감비용과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q_A = 2q_B$를 총저감량 조건에 대입하면 $2q_B + q_B = 300$이므로 $q_B = 100$, $q_A = 200$이다.
2. 균형가격은 공통 한계저감비용이므로 $p = MAC_A = 200$이고 $MAC_B = 2 \times 100 = 200$으로도 확인된다.
3. 감축 후 실제 배출량은 A가 $500 - 200 = 300$단위, B가 $500 - 100 = 400$단위이다. A는 할당량 400단위보다 100단위 적게 배출하여 100단위를 판매하고, B는 할당량 300단위보다 100단위 많이 배출하여 100단위를 구매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100단위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거래량 100단위는 맞지만 가격 100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 200, 거래량 100단위이다.
② X — 가격 100과 거래량 200단위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 200, 거래량 100단위이다.
③ O —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하면 가격은 200이고, A가 B에게 판매하는 배출권은 100단위이다.
④ X — 가격 200은 맞지만 거래량 200단위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거래량 100단위이다.
⑤ X — 거래량 100단위는 맞지만 가격 250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 200이다.

오답 포인트

총저감량 300단위를 그대로 거래량으로 보거나 각 기업의 저감량 중 하나를 거래량으로 보면 안 된다. 거래량은 균형 저감량으로 결정된 실제 배출량과 최초 무료 할당량의 차이이다. 또한 평균저감비용이 아니라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해야 하며, 비용함수의 상수항은 균형가격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체 감축목표로 총저감량 제약을 세우고, 각 비용함수를 미분한 한계저감비용을 서로 같게 하여 기업별 저감량과 가격을 구한다. 그다음 각 기업의 실제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의 차이로 거래량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배출권시장 균형은 한계저감비용의 균등화이고, 거래량은 실제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25.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sqrt{X_A}$, $U_B = \sqrt{X_B}$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X_i > 0 (i = A, 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① 15

② 30

③ 60

④ 90

⑤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최소효용형 사회후생함수에서 두 사람의 효용을 같게 만드는 배분을 찾고, 자원 제약을 이용해 사회후생의 극댓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효용은 $U_A = 3\sqrt{X_A}$, $U_B = \sqrt{X_B}$이고, 자원 제약은 $X_A + X_B = 1000$이다. 사회후생은 $W = \min\{U_A, U_B\}$이므로 두 효용 중 작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두 효용함수 모두 소비량이 늘면 증가하므로 최적점에서는 자원을 모두 사용하고 $U_A = U_B$가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후생 수준을 w라고 두면 $3\sqrt{X_A} = \sqrt{X_B} = w$이다. 따라서 $X_A = w^2/9$, $X_B = w^2$이고, 자원 제약은 $w^2/9 + w^2 = 1000$이 된다. 최소효용형에서는 한 사람의 효용만 더 높여도 작은 효용이 그대로이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효용을 같게 하는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효용 균등 조건에서 $3\sqrt{X_A} = \sqrt{X_B}$이므로 $X_B = 9X_A$이다. 이를 자원 제약에 대입하면 $X_A + 9X_A = 1000$이므로 $X_A = 100$, $X_B = 900$이다. 따라서 $U_A = 3\sqrt{100} = 30$, $U_B = \sqrt{900} = 30$이고,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W = 3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5라는 값이 틀렸다. $W = 15$를 두 효용에 맞추려면 $X_A = 25$, $X_B = 225$만 필요하여 총 250단위만 사용한다. 남은 자원으로 두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극댓값이 아니며, 올바른 극댓값은 30이다.
② O — $X_A = 100$, $X_B = 900$으로 배분하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30이고 1000단위를 전부 사용하므로 달성 가능한 최대 사회후생이다.
③ X — 60이라는 값이 틀렸다. $W = 60$을 달성하려면 $X_A = 400$, $X_B = 3600$으로 총 4000단위가 필요해 자원 제약을 위반한다. 올바른 극댓값은 30이다.
④ X — 90이라는 값이 틀렸다. $W = 90$을 달성하려면 $X_A = 900$, $X_B = 8100$으로 총 9000단위가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 올바른 극댓값은 30이다.
⑤ X — 100이라는 값이 틀렸다. $W = 100$을 달성하려면 $X_A = 10000/9$, $X_B = 10000$으로 총 $100000/9$ 단위가 필요해 보유량 1000단위를 초과한다. 올바른 극댓값은 30이다.

오답 포인트

총자원 1000에 계수 3을 단순히 곱하거나, 한 사람의 효용만 크게 만드는 배분을 선택하면 안 된다.
$W = \min\{U_A, U_B\}$에서는 더 작은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최적점의 핵심은 $U_A = U_B$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소효용형 사회후생함수와 증가하는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먼저 개인별 효용을 같은 수준 w로 놓고, 각 소비량을 w의 식으로 바꾼 뒤 총자원 제약에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효용형의 최적배분은 '작은 효용을 끌어올리는 배분'이며, 이 문제에서는 $U_A = U_B$와 $X_A + X_B = 1000$을 함께 푼다.

NoteBase

문 2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②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③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의 차이, 해로운 외부성의 과다 생산,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기술적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상이며,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괴리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금전적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가격 변화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을 때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적 외부성은 타인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최적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② O. 코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야 당사자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협상할 수 있다.
③ O. 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적비용보다 크다. 생산자는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④ O. 대규모 건설공사가 건축자재 수요와 가격을 올려 다른 건축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가격 변화를 매개로 한 금전적 외부성의 예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이다. 올바르게는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을수록 당사자 간 협상이 용이하고 코즈 정리에 따른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거래비용과 협상의 용이성 사이의 관계를 반대로 제시한다. 거래비용에는 협상 상대 탐색, 정보 수집, 합의와 계약 집행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그 비용이 클수록 협상은 어려워진다. 또한 ④의 피해는 실제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외부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통해 발생했으므로 금전적 외부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향이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미치면 기술적 외부성, 시장가격 변화를 거쳐 미치면 금전적 외부성으로 판단한다. 코즈 정리의 조건은 '명확한 재산권과 낮은 거래비용'으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술적 외부성은 직접 영향, 금전적 외부성은 가격 경유, 코즈 협상은 재산권 명확·거래비용 최소이다.

NoteBase

문 27.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②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③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④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⑤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클럽재·가치재를 구분하고,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과 선호표출 장치의 성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지닌 재화이다. 클럽재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일정 수용 범위까지 소비의 경합성이 낮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혼잡으로 경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이며, 경합성·배제성에 따른 공공재 분류와는 기준이 다르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에서는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클라크 조세는 개인의 보고가 사회적 선택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실한 선호 표출을 우월전략으로 만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고 혼잡 전에는 비경합적이지만, 이용자가 수용 능력에 가까워지면 혼잡비용이 생겨 부분적인 경합성이 나타난다.

② O.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 한 명을 추가할 때의 한계비용은 0이다.

③ O.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효율적 공급 조건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다.

④ O. 클라크 조세는 개인이 거짓으로 선호를 보고하여 얻는 이익을 제거하도록 설계되므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이다. 가치재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보아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로, 교육·의료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 사적재일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가치재는 순수공공재와 별개의 분류이며 반드시 순수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부가 공급하거나 장려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화를 순수공공재로 판단하면 ⑤를 놓치기 쉽다. 가치재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기준으로 하고,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화의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비경합성·비배제성을 묻는다면 공공재 분류이고, 정부가 바람직한 소비를 장려하는지를 묻는다면 가치재 개념이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은 한계편익의 수직합과 한계비용의 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클럽재는 배제 가능·혼잡 시 경합, 가치재는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이다.

NoteBase

문 28.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②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③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④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과반수제, 최적다수결제, 전원합의제, 점수투표제와 투표거래가 집단의사결정 및 선호 강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반수제는 전체 투표자의 과반이 지지하는 대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며, 선호가 순환하면 투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최적다수결제는 의결 정족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외부비용과 증가하는 의사결정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정족수를 찾는 방식이다.
린달 모형은 각 개인이 공공재의 한계편익에 따라 서로 다른 조세가격을 부담하고 만장일치로 공공재 공급에 합의하는 모형이다.
점수투표제는 유권자가 대안별로 점수를 배분하므로 단순 찬반투표보다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기 쉽다.
투표거래는 서로 강하게 원하는 사안에 표를 교환하는 행위이므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지만, 담합이나 소수의 이익 집중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과반수제에서는 개인별 선호가 합리적이어도 집단의 다수결 선호가 A보다 B, B보다 C, 다시 C보다 A를 선호하는 식으로 순환할 수 있다. 이것이 투표의 역설이다.
② O.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많아질수록 합의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므로 협상·조정에 드는 의사결정비용이 커진다. 반대로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생기는 외부비용은 줄어든다.
③ O. 린달 모형은 개인별 한계편익에 대응하는 조세가격을 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공공재 공급량을 찾으므로 전원합의에 의한 공공재 배분 가능성을 보여준다.
④ O.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유권자가 각 대안에 서로 다른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투표제는 단순히 한 표만 행사하는 방식보다 선호의 강도를 더 잘 나타낸다.
⑤ X. 틀린 표현은 '투표거래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이다. 투표거래에서는 각자가 선호가 약한 사안의 표를 양보하고 선호가 강한 사안의 표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투표거래가 언제나 효율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⑤는 투표거래의 부작용과 기능을 뒤섞은 선지이다. 투표거래에 담합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편중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곧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결 정족수가 높아지면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고 외부비용은 감소한다. 점수 배분이나 표의 교환처럼 강한 선호에 더 많은 투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반수제는 순환 가능, 높은 정족수는 결정비용 증가, 린달은 만장일치, 점수투표·투표거래는 선호 강도 반영이다.

NoteBase

문 29.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②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③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④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거래균형의 조건, 환경세와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전체 허용배출량을 정해 배출권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수량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총량을 정하고 시장은 배출권 가격을 형성한다. 기업은 배출권 가격과 한계저감비용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결정하며, 거래균형에서는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져 정해진 총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가 공급한 배출권의 총량이 목표 배출량을 나타낸다. 배출권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배출권이 모두 사용되면 각 기업이 선택한 배출량의 합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이다. 정부는 목표 총배출량을 정하면 되므로 이를 설정하는 데 개별 기업별 한계저감비용 정보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 기업들이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에 따라 거래하면서 비용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O —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총배출량이 고정되고 배출권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 등으로 저감비용이 변하면 배출권 가격도 조정될 수 있어, 명목 세율이 고정된 환경세보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④ O —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오염을 추가로 줄이는 것보다 배출권을 사는 편이 유리하므로 배출권 구매자가 된다. 반대로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을 더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⑤ O — 거래가 가능한 균형에서는 어떤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더 높거나 낮으면 상호 이익이 되는 추가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거래가 끝난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고 기업 간 한계저감비용도 같아진다.

오답 포인트

②는 비용효율적인 배출량 배분에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그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선지이다.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시장거래가 기업별 한계저감비용 정보를 드러내고 배분을 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정부는 총량, 시장은 가격과 기업별 배분'을 담당한다고 구분한다.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낮은 기업은 더 저감하여 배출권을 팔며, 균형에서는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암기 포인트

정부는 배출총량만 정하고, 거래는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만든다. 고비용 기업은 사고 저비용 기업은 판다.

NoteBase

문 30.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②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③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④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 이다.

⑤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니스카넨 모형에서 예산극대화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차이, 그리고 미그-빌레인저 모형과의 생산량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니스카넨 모형: 정보 우위를 가진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관료제 모형이다.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므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한다.
미그-빌레인저 모형: 관료가 총예산 자체보다 재량적 예산을 중시한다고 보아 니스카넨 모형보다 작은 생산량을 도출한다.
핵심 대비: 사회적 최적 생산량 <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 <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량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지지만, 예산극대화 관료는 그 수준을 지나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 따라서 과다생산이 발생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이다. 실제로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량이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더 많다.
③ O — 관료제의 비효율을 줄이는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되 생산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민간 생산자의 경쟁을 활용하여 관료조직의 비용·정보 독점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이다.
④ O — 니스카넨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량에서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인 총편익−총비용은 영(0)이 된다.
⑤ O —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고, 후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편익=총비용의 제약이 충족되는 최대 생산량을 선택한다. 이는 니스카넨 모형의 핵심 결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두 관료제 모형의 생산량 순서를 거꾸로 제시한다. 총예산을 극대화하는 니스카넨 모형이 재량적 예산을 중시하는 미그-빌레인저 모형보다 생산량을 더 크게 선택한다. 또한 사회적 최적 조건인 한계편익=한계비용과 니스카넨의 선택 조건인 총편익=총비용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량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 < 미그-빌레인저 < 니스카넨'의 순서로 판단한다. 조건을 물으면 사회적 최적은 한계편익=한계비용, 니스카넨은 총편익=총비용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니스카넨은 예산 극대화·최대 생산·총편익=총비용, 미그-빌레인저는 재량적 예산·더 작은 생산량이다.

NoteBase

문 31.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②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⑤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내부·외부 편익, 실질적·금전적 편익, 유형·무형 편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내부적 편익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나 사업구역 안에 귀속되는 편익이고, 외부적 편익은 그 밖의 제3자나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편익이다.
실질적 편익은 재화·서비스의 증가나 비용 절감처럼 사회 전체의 순후생을 바꾸지만, 금전적 편익은 가격·소득의 변화를 통해 한 집단의 이득이 다른 집단의 손실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회 전체의 순편익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유형적 편익은 시장에서 비교적 관찰·측정하기 쉬운 편익이고, 무형적 편익은 쾌적성·안전성처럼 시장가격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편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자신의 관할이나 사업 내부에 귀속되는 내부적 편익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관할 밖에 파급되는 외부적 편익은 과소평가하기 쉽다. 따라서 '내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공공사업의 목표가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는 표현이다. 공공사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의 교정, 지역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이다. 금전적 편익은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따른 집단 간 이전인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의 순후생을 직접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편익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무형적 편익이 크다'라고 크기를 일반화한 것이다. 유형·무형의 구분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분이며, 어느 편익이 더 큰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두 편익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
⑤ O — 공공사업은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외부효과와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나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잠재가격 등 시장가격과 다른 사회적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금전적 편익'을 실제 현금상의 이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순편익으로 오인하기 쉽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금액으로 나타나는지보다 사회 전체의 실질 자원이 늘어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④의 유형·무형 구분은 편익의 크기가 아니라 측정 가능성에 관한 구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사회 전체의 순후생을 기준으로 말하는지 확인한다. 집단 간 소득 이전에 그치면 금전적 편익이고, 실제 자원 증가나 비용 절감이면 실질적 편익이다. 시장가격이 외부효과와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잠재가격 등 사회적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사업 평가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실질적 순편익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적 편익은 이전효과, 무형적 편익은 측정 곤란, 시장가격의 한계는 잠재가격으로 보완한다.

NoteBase

문 32.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교육기회 확대
ㄴ. 누진세제
ㄷ. 인두세 강화
ㄹ. 복권제도 활성화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각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획득 기회를 넓히거나 조세 부담을 소득에 따라 재분배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육기회 확대는 인적자본 축적과 소득획득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다. 누진세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수단이다. 반면 인두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크고, 복권은 저소득층이 소득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교육기회 확대는 소득획득 능력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ㄴ의 누진세제는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후소득 격차를 축소한다. 따라서 ㄱ과 ㄴ의 조합이 옳다.
② X — ㄷ의 인두세 강화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조세 부담을 키우고, ㄹ의 복권제도 활성화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불평등 완화 정책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ㄷ, ㄹ'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의 '인두세 강화'가 틀렸다. 인두세 강화가 아니라 교육기회 확대와 누진세제를 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보아야 하므로 'ㄱ, ㄴ, ㄷ'에서 ㄷ을 제외한 'ㄱ, ㄴ'이 옳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으며 ㄱ이 빠져 있다. 'ㄴ, ㄷ, ㄹ'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렸다. 'ㄱ, ㄴ, ㄷ, ㄹ'에서 ㄷ과 ㄹ을 제외한 'ㄱ, ㄴ'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인두세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부과하므로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있다. 또한 복권 당첨금만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복권 구입 지출의 상대적 부담과 당첨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획득 기회를 확대하는지, 또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세후소득을 재분배하는지를 확인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담시키거나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을 높이는 제도는 불평등 완화 수단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교육기회 확대·누진세는 분배 개선, 인두세·복권은 분배 개선책이 아니다.

NoteBase

문 33.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②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③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④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⑤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앳킨슨 지수가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를 이용해 소득불평등을 나타낸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실의 불균등한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한 소득수준이다. 평균소득을 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y_e라 하면 앳킨슨 지수는 $A = 1 - \frac{y_e}{\mu}$이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클수록 y_e가 낮아져 평균소득과의 격차 및 앳킨슨 지수가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회피도를 포함한 사회후생함수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득분배에 관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격차는 줄어든다'이다. 실제로는 사회후생 손실이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낮아져 1인당 평균소득과의 격차가 커진다.
③ O — $y_e = \mu$이면 $A = 1 - y_e/\mu = 0$이므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④ O — 동일한 소득분배라도 평가자의 불평등 회피도에 따라 사회후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도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⑤ O — 표준적인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

오답 포인트

②는 '사회후생 손실이 커지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반대로 제시한다.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는 후생손실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 = 1 - y_e/\mu$에서 평균소득이 같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낮아질수록 앳킨슨 지수와 평균소득과의 격차가 모두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후생손실 증가 → 균등분배대등소득 하락 → 평균소득과의 격차 증가 → 앳킨슨 지수 증가이다.

NoteBase

문 34.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
ㄴ. 시장실패의 보완
ㄷ.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ㄹ.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회보험의 도입 근거와 재원 조달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은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ㄱ: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입 확보는 사회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보험료는 사회보험 급여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이다.
ㄴ: 민간보험시장에서 역선택 등으로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ㄷ: 조세만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조달한다.
ㄹ: 개인이 위험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ㄴ,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맞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ㄷ과 ㄹ도 빠져 있다.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이 아니라 시장실패 보완,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온정적 간섭주의가 관련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② X — ㄹ은 맞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ㄴ과 ㄷ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③ X — ㄴ과 ㄷ은 맞지만 ㄹ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근거인 온정적 간섭주의까지 포함하여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이 잘못 포함되고 ㄹ이 빠져 있다. ㄱ을 제외하고 ㄹ을 추가한 ㄴ, ㄷ,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⑤ O — 시장실패의 보완,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관련 없는 ㄱ을 제외한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보험료가 정부를 통해 징수된다는 점 때문에 ㄱ의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을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오인하기 쉽다. 보험료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 재원이며, 일반적인 재정수입 확보 자체가 제도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문항이 '모두'를 요구하므로 맞는 항목 일부만 담은 ③도 정답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보험 관련 진술은 '왜 국가가 개입하는가'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로 나누어 판단한다. 시장실패와 온정적 간섭주의는 개입 근거이고, 보험료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일반 재정수입 확보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시장실패 보완·온정적 개입·보험료 재원, 일반 재정수입 확보는 아니다.

NoteBase

문 35.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ㄱ)라고 부른다. (ㄱ)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ㄴ)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②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④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⑤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예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하는지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목별 예산제도: 인건비·물건비 등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지출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사이의 사업 중복이나 예산 편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유사한 기능과 사업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고 성과와 비용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영기준 예산제도: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핵심 대비는 품목별 예산은 지출항목, 프로그램 예산은 기능·사업, 영기준 예산은 원점 재검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맞지만, ㄴ을 영기준 예산제도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묶고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운영한 제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ㄴ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고쳐야 한다.
② O — 지출항목별로 편성하는 ㄱ은 품목별 예산제도이고, 비슷한 기능의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을 절감하며 2007년부터 운영한 ㄴ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③ X — ㄱ과 ㄴ을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지출항목별 편성인 ㄱ은 품목별 예산제도이고, 기능·사업별로 묶는 ㄴ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④ X — ㄱ과 ㄴ의 개념을 서로 뒤바꾸었다. ㄱ은 품목별 예산제도, ㄴ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ㄴ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맞지만, ㄱ을 영기준 예산제도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지출항목별로 편성하는 ㄱ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소요예산을 절감한다'는 표현만 보고 ㄴ을 영기준 예산제도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의 업무를 하나로 묶는다'와 '2007년부터 도입'이며, 이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가리킨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핵심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출항목·통제가 나오면 품목별 예산제도, 기능·사업의 묶음과 성과가 나오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년도 예산을 배제한 원점 재검토와 우선순위가 나오면 영기준 예산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품목별은 '무엇에 쓰는가', 프로그램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영기준은 '처음부터 필요한가'를 본다.

NoteBase

문 36.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②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⑤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가치판단별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 사회선택이론의 가능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상태의 바람직함에 순위를 매기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롤즈형은 가장 낮은 효용을 중시하는 최소극대화 원칙이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다. 공리주의형은 개인 효용의 합을 중시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전제하면 사회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이다. 롤즈형 사회후생함수는 최저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으로 사회후생을 판단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다. 우하향하는 직선은 개인 효용의 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형에 해당한다.
② O. 사회후생함수는 서로 다른 사회상태에 사회적 순위를 부여하므로 변화 전후의 사회후생을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O. 효용가능경계는 달성 가능한 효용 조합을 나타내고, 사회후생함수는 그 조합들의 사회적 바람직함을 평가한다. 두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달성 가능한 배분 중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하는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④ O. 사회후생함수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가치판단이 반영되므로 공리주의형, 롤즈형 등 서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⑤ O.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민주적 사회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센은 제한된 선택가능성 사이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춘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롤즈형과 공리주의형의 곡선 모양을 바꾸어 놓았다. '최저 효용을 중시한다'는 말에서 완전보완재형의 L자 곡선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사회적 선택의 절대적 불가능으로 확대해석하면 ⑤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회후생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개인 효용의 합이면 공리주의형의 우하향 직선, 가장 낮은 효용이면 롤즈형의 L자 곡선으로 판단한다. 사회선택이론에서는 불가능성 정리의 전제와 제한된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효용의 합은 직선, 최저 효용은 L자형이다. 사회후생함수는 가치판단을 반영하여 사회상태의 순위를 정한다.

NoteBase

문 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③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④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소득분배 불평등 지표의 해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득재분배정책은 조세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된 소득분포를 더 평등하게 조정하는 정책이다.
로렌츠곡선은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내며,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앳킨슨 지수는 사회의 불평등 회피 정도를 반영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득재분배정책이 분배를 개선하면 로렌츠곡선은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② O.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이전에 과세하여 세입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③ O. 현금보조와 물품보조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대표적인 재분배 수단이다.
④ O. 로렌츠곡선에 의한 분포 비교와 지니계수·앳킨슨 지수에 의한 불평등 평가는 어떤 분포 또는 불평등을 더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에 관한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특히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회피 정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이다. 지니계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올바르게는 '지니계수가 작아지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지니계수의 증감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지니계수는 평등의 정도가 아니라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값이 커지는 것을 개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하고, 지니계수는 작아질수록 평등하다는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정책수단은 조세와 같은 세입 측면과 현금·물품보조 같은 지출 측면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NoteBase

문 38.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②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③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팽창을 설명하는 학자·이론과 대표 원인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브라운-잭슨: 중위투표자의 공공재 선택을 통해 소득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한다.
보몰: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향상으로 상대가격과 공급비용이 상승하는 비용질병을 강조한다.
피코크-와이즈만: 전쟁·사회적 격변기에 조세부담의 허용 수준이 높아져 정부지출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위효과를 설명한다.
부캐넌: 유권자가 정부지출의 편익은 크게 인식하고 조세비용은 작게 인식하는 재정환상 때문에 정부지출이 과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바그너: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가 기능이 확대되어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브라운-잭슨은 바그너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공공재 선택과 연결하여 설명하므로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보몰'과 '전위효과'의 연결이다. 전위효과는 피코크-와이즈만의 이론이며, 보몰은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상대비용 상승으로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피코크-와이즈만'과 '공공부문의 느린 생산성 향상'의 연결이다. 이는 보몰의 비용질병 설명이며, 피코크-와이즈만은 사회적 격변에 따른 전위효과를 주장한다.
④ X —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고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부캐넌의 재정환상론에서는 정부지출의 편익은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반면 조세부담과 비용은 불명확하게 인식되어 과소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과다해질 수 있다.
⑤ X — 틀린 부분은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이다.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발전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와 ③은 전위효과와 비용질병의 학자 이름을 서로 바꾸었고, ④와 ⑤는 재정환상론과 바그너 법칙의 인과 방향을 반대로 제시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보다 먼저 문장의 원인어를 찾는다. '중위투표자'는 브라운-잭슨, '사회적 격변·전위효과'는 피코크-와이즈만, '생산성 격차·비용질병'은 보몰, '편익 과대·비용 과소 인식'은 부캐넌, '소득 증가와 공공부문 확대'는 바그너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브라운-잭슨=중위투표자, 보몰=비용질병, 피코크-와이즈만=전위효과, 부캐넌=재정환상, 바그너=소득 증가·공공부문 확대이다.

NoteBase

문 3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②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③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④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⑤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에서 투자계획의 채택 기준과 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의 판단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투자계획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법은 미래의 순편익을 자금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지를 본다.
내부수익률법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과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을 비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사람의 후생이 실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파레토기준만을 요구하지 않고,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잠재적 보상이 가능한지를 보는 칼도-힉스 기준에 기초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잠재적 보상이 가능한 투자계획을 채택할 수 있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 평가에 널리 쓰이지만 민간부문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계획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다.
③ O —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바꿀 때의 할인율은 투자에 투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기간당 수익, 즉 자금의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이다. 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의 부호로 채택 가능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비교 가능한 투자계획 중 순현재가치가 더 큰 계획을 선택하는 우선순위 판단에도 이용된다. 올바르게는 '현재가치법은 채택 가능성과 투자계획 간 우선순위 판단에 이용될 수 있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기각된다'이다. 내부수익률이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면 투자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므로 투자계획을 채택한다. 올바르게는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면 그 투자계획은 채택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파레토기준만', ②의 '공공부문에만', ④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한다'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또한 ⑤는 내부수익률과 할인율의 대소관계에 따른 채택·기각 결론을 반대로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을 자금의 기회비용과 연결하고, 순현재가치가 양수이면 채택한다.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면 채택한다. '오직', '~만', '결정하지 못한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은 적용 범위와 기능을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율은 자금의 기회비용, 순현재가치는 클수록 유리, 내부수익률은 할인율보다 크면 채택이다.

NoteBase

문 4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8년에 시행되었다.

②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이다.

③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④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연혁,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 적용 범위와 기초연금의 보완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월 소득을 일정 범위 안에서 표준화한 금액이다. 당연적용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이다.

핵심 구분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에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다. 사업장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 2022년 1월 1일에는 일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기준에 소득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전체 사업장의 적용 확대 시점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② O — 국민연금의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공포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연기되었고, 이후 이를 수정·보완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88년에 제도가 시행되었다.
③ O — 2022년 당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합계 9%가 납부된다.
④ X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된 때는 2022년이 아니라 2006년 1월 1일이다. 틀린 표현은 ‘2022년부터’이고, 올바른 표현은 ‘2006년부터’이다.
⑤ O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급여액이 적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도 포괄하므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2022년부터'는 2022년에 일부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이 확대된 사실을, 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시점과 바꾸어 놓은 표현이다. 전체 사업장 적용 확대는 2006년에 완료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연금의 연혁은 '1973년 법적 기반 마련 → 1988년 제도 시행 → 1999년 도시지역 확대 → 2006년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적용'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보험료는 총 9%와 근로자·사용자 각 4.5%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은 1973년 법 제정, 1988년 시행, 2006년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적용이다.

NoteBase